

전남, '임신에서 성년까지' 맞춤형 정책이 출산율을 높였다

2030년까지 희망 합계출산율 1.5명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출생기본수당·출산장려금 지급에 시·군별 특색있는 지원

'희망 출산율 1.5명 달성'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저출생 대책으로 달성하겠다고 내놓은 합계 출산율 목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합계출산율 1.5명은 지난 2015년(1.55명)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치다. 매년 감소하던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0.97) 이후 오름세로 바뀌고 있다.

2023년(0.97)에 맞먹더니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저출생 사회 속에서 전년도 합계출산율보다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데는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 펼치는 데 공을 쏟아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출생기본수당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22개 시·군도 참여하는 정책이라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하고 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0세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시·군마다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도 무시할 수 없다. 첫째아만 낳아도 목포는 150만원, 여수는 500만원, 진도는 1000만원, 고흥 108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만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임신·난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출산가정 양육비용 경감 등 4개 분야 39개 출산지원사업에 615억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3회까지 임신 전 가입력 검사를 지원해준다. 정부 지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검사 항목도 보강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 횟수를 넘은 초과 대상자도 추가로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비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고위험 임신비 최대 3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최대 1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 취약 산모·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도 보조해준다. 12개 시·군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해 운영한다. 현재 5곳에서 운영중인데, 올해 여수·광양 등에서 새로 문을 열고 내년에도 목포·영광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시·군의 특색있는 출산정책도 적지 않다. 여수시의 경우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를 지원하고 장남감도서관에서 장남감도 빌려준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목포시는 최대 6개월 간 자동차 카시트를 빌려주고 순천시에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등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아가주 민등복증을 발급해주고 고흥군은 백일, 돌 때 백일상, 돌상 세트를 제공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출생정책은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尹탄핵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각하 분분

파면 현재 재판관 6명 동의 필요 최종 선고 3월 14일·7일 등 전망

법조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도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됐고, 작전에 깊숙이 관여한 군 지휘관들이 언론 인터뷰나 국회 등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수 폭로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에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였다.

민법학계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SNS에 "헌법에 정해진 비상

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계엄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현재는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진행 추이를 재판관 8명 전원 인용 결정이 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며 "3월 7일이나 11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SNS에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증인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면서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견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 검정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므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나 국회 공무원 또는 시민을 체포한 일이 없고 계엄 시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권이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히

게 행사됐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주고받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렸다.

"4대 4'나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 사건처럼 재판관들의 견해가 정치적 성향 지향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추측이다.

선고 시기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현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마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였다.

현재는 정식 변론에 돌입한 뒤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열고 하루에 최장 10시간 넘게 재판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문 대행이 변론과 마찬가지로 평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현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체로 3월 중순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3월 7일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李선거법 항소심 징역2년 구형...野 "정치검찰 정적죽이기"

"재판부 현명한 판단...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국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날 것이고 정치 검찰은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만들어 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다"며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는 확장 해석"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어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에 사건을 조작 기소하고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관광제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가부심이 되는 여행
장립 54주년 특별기획

롯데관광이 만든 프리미엄 여행 - 하이엔드
HIGH &
비즈니스 클래스 / 5성급 호텔 / 5성급 호텔
전문상담 : 02)2075-3111

대한항공 오슬로 특별 직항 전세기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북유럽 4개국 9일

품격 **8,390,000**원부터*

선착순 5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객 한정 (~3/3 까지)

- 프리미엄 국적기 대한항공 오슬로 직항 전세기 탑승
- 현지 항공 이동 2회 포함(버스 이동 약 30시간 단속 효과)
- 3대 피오르 관광 및 게이랑에르 유람선 탑승
- 호화 크루즈 숙박 포함(실저리안&DFDS)
- 피오르가 눈 앞에 펼쳐지는 호텔에서의 하룻밤!

[정부인가 조건]

신과 인간의 경계,
카즈베기를 마주한다!

5/11,18,25 6/1,8,15,22,29 [단 8회]

대한항공 조지아 특별 직항 전세기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코카서스 3개국 9일

품격 **6,390,000**원부터*

선착순 5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객 한정 (~3/3 까지)

- 카즈베기의 낭만 가득한 하룻밤 'ROOMS HOTEL KAZBEGI'
- 트빌리시의 야경 View 레스토랑 'Funicular Restaurant'
- 항공 이동 1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피티치트 가득한 카즈베기 & 아자트 EASY 트레킹 2회
- 오롯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O쇼핑 & NO음식]

[정부인가 조건]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한국서비스대상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 15회 수상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1년 연속수상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산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무안/청주공항 여행보험차리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교출발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의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면표환서 식사요구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여행사별 상한 금액이 있고 상품에 따라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음)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정보안내] ●여행유의 ●여행지제 ●항공신고 ●여행금지 ●4대기종 구분되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통보를 받음